

# 달빛내륙철도 주문...송영길 대표에 무게추 쏠린다

청와대 민주 신임 지도부 간담회  
송 대표 “모든 정책 당 의견 반영”  
문 대통령 “당 주도 정책 바람직”  
부동산세 기준완화 여부 시험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청와대에서 송영길 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당·정관계 변화지만 별다른 잡음 없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영호남 현안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 문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 낼 것인지를 주목했다. 송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대구와 광주가 연결되는 달빛내륙철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며 “이런 현안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당이) 정확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기말 정권의 균형추가 당으로 기울어 가는 것은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당을 사실상 지배해왔다는 점에서 당정 간의 관계 변화가 원만히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전문(전문)인 진영과는 거리가 있는 비주류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당·정 관계 변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에서는 4·7 재보선 참패에 있어 전문 진영 및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만 가진 사퇴를 통해 물러나게 하고 임해숙 과기부장관과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했다면 민심에 더는 의미는 더 컸을 거라는 것이다. 또 이번에는 청와대의 체면도 있어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안이 불거진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도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구심점으로 당을 지목,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청와대의 체면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원탁’ 정신을 강조한 것과 별개로,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정 사이의 대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국정 성과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여당은 시시각각 바뀌는 ‘대권 풍향계’에 따라 차별화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GTX-D 노선이 ‘김부선’으로 끝나는 바람에 서부 지역에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소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최근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으나, 청와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놓고 당·청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정국 3라운드’ 강대강 대치 예상 여야 김오수 청문 앞두고 전열 재정비

“코드인사” vs “검찰개혁 책임자”  
원 구성,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국회가 ‘청문 정국 3라운드’에 접어들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말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을 최대한 부각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퇴직 후 법무법원에서 8개월 동안 월평균 2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등 청문회 전부터 자질과 도덕성 논란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김 총리 차녀 일가의 리임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 제3차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적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특이한 펀드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검찰계

혁 과제를 수행하고 검찰을 안정시키는 데 적절한 인물”,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 등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은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펼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 과정을 통해 적인 여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정국과 맞물려 원 구성도 여야의 충돌지점이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교체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은 윤영·법사·외통·정무위원 등 4개 자리다.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지도부 관계자는 “다음 분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치 차원에서 외통·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지만, 역시나 ‘입법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이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쪽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여당 몫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법사위를 돌려놓는 일은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에선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분위기가.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 주자들 경선 연기·계임 룰 결정 요구 봇물...뜸들이는 지도부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빨리 정리”  
경선 일정 논의 내달 이후 가능할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 접목되고 있다. 경선 연기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다 ‘계임의 룰’인 경선 규칙을 보완해달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경선 논의에 돌입하는 순간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최대한 공식 논의 일정을 늦추며 속도조절하려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여론조사 50%”인 예비경선 룰에 대해서도 “국민여론 조사의 경우 국민 전체의 여론이 반영되도록 정당 지지를 묻지 말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도 지도부가 빨리 경선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서둘러 정리해달라”(민형배 의원)며 지도부가 나서서 논란 확산을 차단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에서 “경선 일정 논의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민생을 먼저 챙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

자도 “최소한 이번 달에는 대선기획단 관련 논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부동산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급한 상황에서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선 문제는 당내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점을 늦추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당 주도성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만 ‘계임의 법칙’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조속한 상황 정리를 요구하는 주자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마냥 이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도부 일각에서도 경선 일정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